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2월 01일 (수)
제 270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당일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국회에 올려 퍼진 '국보법 폐지'
2. <전쟁범죄 연재> ⑥ 절망의 씨앗 - 열화우라눔
3. 이달의 인권(2004년 11월)

국회에 올려 퍼진 '국보법 폐지'

시위자들 전원연행...피해자들, 호소문 전달

국가보안법 제정일인 12월 1일을 하루 앞둔 30일,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 합성이 올려 퍼졌다.

전국연합 오종렬 의장을 비롯한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피해자와 가족들은 국회 중앙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괴물 국보법과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며 "국보법이 야말로 17대 국회에서 1순위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2월 1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국보법 폐지 호소문 299통이 담긴 상자를 들고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실을 찾았다. 피해자들은 "국보법 폐지에 대한 확답을 듣기 위해 천 대표에게 여러 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어 여기까지 왔다"며 방문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국보법은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피해자 뿐 아니라 친척,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히는 잔인한 악법"이라며 국보법 폐지의 뜻은 이제 국회에 있다고 호소했다.

한총련 활동으로 수배를 당한 딸이 2001년 6월부터 한번도 집에 오질 못하고 있다며 말문을 연 유씨자 씨는 "피해자 가족들을 대표해서 왔다. 피해자들과 가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당과 싸움이나 하고 있냐"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유 씨는 이러한 답답한 마음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편지를 써왔으며, 낭독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천 대표가 원탁회의 등 국회 일정을 이유로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면담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천 대표실에 호소문을 전달한 피해자들은 이어 한나라당 박근혜 원내대표실에도 국보법 폐지의 뜻을 담은 편지를 전했다.

한편, 오후 2시 40분 경에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한총련 수배자인 김제연 씨 등 40여명의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즉각 상정, 처리하라"고 외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17대 정기 국회가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국보법 폐지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직접행동을 통해 국회에 경고하고 나선 것. 그러나 이들은 20여분만에 경찰에 의해 전원 연행돼 용산서, 강서서, 양천서 등 7개 경찰서로 분산 수용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여의도 농성장에서 연행자들에 대한 석방과 국보법 즉각 폐지를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열었다. 국보법 제정 56주년이 되는 1일 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보법 완전폐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전쟁범죄 연재> ⑥ 절망의 씨앗 - 열화우라눔

유럽연합 녹색당 의원 캐롤라인 투카스는 영국의 '전쟁피해 어린이(CVW)' 출범식에서 "이라크 의사들을 통해 팔다리가 짧거나 실명한 채 태어나는 심각한 기형아가 1991년 1차 걸프전 이후 이라크에서 7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미군이 사용한 전쟁무기의 후유증이 이런 참혹한 현상을 빚어낸 것이다.

미군은 1991년에 이어 이번 전쟁에서도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했다. 원전연료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우라늄으로 만들어진 이 폭탄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 전차나 탱크 등의 장갑도 뚫는다. 핵무기는 아니지만 공격목표와 충돌하는 순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미세한 방사능 먼지를 내뿜고 있어 공격을 당한 일대에 지속적인 방사능 피해를 만들어낸다. 국제 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반인도적 전쟁무기인 것이다. 미국과 영국이 이번 이라크전에서 열화우라늄탄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몇몇 전문가들은 1991년 3백 톤을 사용했고 이번에는 그보다 5배나 많은 양을 사용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엄청난 양의 열화우라늄탄이 이라크의 팔루자, 사마라, 라마디, 바쿠바에 다량 투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라크 남부 바스라 의과대학 전문의 제난 알리는 "91년 이후 어린이 백혈병은 100% 증가했고 암 발병률이 242% 늘었으며, 올해 비정상아 출산이 정상아 출산을 앞지르고 있다"고 심각성을 밝혔다. 걸프전 이후 10년 동안 암, 백혈병의 발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끔찍한 질병은 이라크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열화우라늄탄에서 나온 방사능 먼지는 바람을 타거나 티그리스 강물을 타고 주변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 처음으로>

이달의 인권(2004년 11월)

흐름과 쟁점

1. 정부의 '공무원노조 죽이기'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장을 분쇄하고 투표함을 탈취하는 등의 탄압을 벌여 투표가 중단됐지만 공무원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선언했다.(11.10) 이에 경찰은 즉각 공무원노조 핵심 간부 33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11.12)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돼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5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가졌고(11.14) 다음 날 공무원노조 전국 77개 지부 4만여 명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해 총파업에 가담한 노조원 3천2백여 명에 대해 파면·해직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경찰은 전국적으로 파업 참가자 150여 명을 연행했다.(11.15) 공무원노조가 '단체행동권'을 요구하며 진행한 파업은 정부의 거센 탄압으로 이틀만에 종료됐다. 정부는 "3천6백여 명의 파업 참가자 전원을 파면·해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11.16) 파면 72명, 해임 64명, 징직 71명 등 1,360명의 공무원노조원들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전국의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의 '공무원노조 사냥'이 명분 없는 탄압"이라고 항의했다.(11.25)

2. 국보법 56년, 이제 끝장내자!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시키겠다'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11.2) 경찰이 국회 앞 농성 천막들을 폭력적으로 철거하자 농성단은 "경찰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11.4) 민변 변호사들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11.9)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개혁입법안 국회 처리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하자 국민연대는 열우당사 앞에서 '당의장의 발언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11.11)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국보법 폐지를 위한 무기한 단식기도에 돌입했고(11.17) 전국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등 목회자 2004명도 '국보법 폐지 선언'을 발표했다.(11.22) 열우당이 한때 국보법 폐지 처리를 내년으로 유보하겠다는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인권사회단체들은 열우당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비판하며 "국보법 올해 안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1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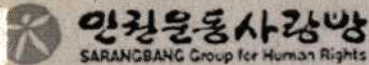
3. 비정규직 관련법안, '연기'가 아니라 '철회'!

103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11.10)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에 "비정규 관련법안의 반인권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을 촉구하며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11.23) '전국비정규직노조' 대표자 30여 명은 '비정규직 관련법안 철회'를 주장하며 삭발식을 진행하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여당이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연내 처리 유보를 시사하자 당초 예고했던 '무기한 총파업'에서 '시한부 총파업'으로 방침을 바꿨다.(11.24) 전국비정규직노조 대표자 4명은 국회 안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땅을 밟지 않겠다"며 고공농성을 시작했고, 민주노총은 6시간 동안 시한부 파업을 진행하는 데 그쳤다.(11.2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기지 않기로 결정해,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연내처리는 불가능하게 됐지만 그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11.30)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안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2월 02일 (목)
제 270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축하 받을 수 없는 탄생
2. 세계 에이즈의 날, "감염인들의 인권은 없었다"
3. <기획>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③한국에바라지회

축하 받을 수 없는 탄생

국보법 56년, 폐지 결의 56명 삭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꼭 56년째 되는 날인 12월 1일, 더이상 이날을 눈물과 한숨으로 맞이할 수 없다는 의침이 서울 여의도 하늘 아래 울려 퍼졌다.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400여 명의 학생,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결의대회는 어느덧 30일째를 맞이한 단식농성자 8명의 인사와 편지 낭독으로 시작했다. "56년에 비하면 30일이라는 단식기간은 짧다"며 말을 연 이들은 "민중들의 인권을 짓밟고 자란 국가보안법에 이제 힘차게 도끼질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단식농성에 함께 하고 있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송현섭 정책위원장은 단식투쟁기간 동안의 심경을 나타낸 편지글 낭독을 통해 자신의 세 살짜리 딸 아이를 생각하면, 아이의 상상력까지도 옥죄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다.

이어 사회단체 활동가, 민주노동당 당원, 학생, 시민 등 각계 각층 56인의 삭발식이 진행되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굳은 의지를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냄으로써 표현한 것. 삭발식은 애초 국가보안법의 나이와 같은 56명이 참가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즉석에서 자발적으로 10여명이 더 참여해 약 1시간에 걸쳐 삭발식이 진행됐다. 일부 삭발자와 집회 참가자들은 복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으며, 머리를 깎은 이들은 서로 악수와 포옹을 하기도 하였다. 삭발식에 참여한 민주노동당 유선희 최고위원은 "삭발 전에는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머리를 자를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눈물이 난다"고 전했다. 삭발식 과정을 내내 일어서서 지켜보고 있었던 대학생 김경희 씨는 "앞에서 삭발을 하면서까지 결의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니 정치·사상의 자유뿐 아니라 우리 일상까지 억압해 온 국가보안법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다"며 국보법이 폐지되는 순간까지 열심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결의대회에 앞서 '민족의 화해와 국가보안법 폐지 기독교 운동본부'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기독교인 금식기도회'를 열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에서는 30만 명이 상이 참여한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또 부산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부산연대'에서 열린우리당 부산시당을 점거해 농성에 들어가는 등 전국 곳곳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함성을 드높였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안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구했고,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의 제청으로 법안이 기습적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인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이 경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가 최초로 국회에 상정된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더이상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오는 3일, 형법보완을 전제로 한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추진하기로 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 처음으로>

세계 에이즈의 날, "감염인들의 인권은 없었다"

눈물을 닦아주듯 명수 수건을 쓸어 내리던 손이 힘차게 하늘을 향해 뻗는다. 국가인권위원회 앞 거리에서는 쌀쌀한 바람을 뚫고 살풀이가 벌어졌다. 12월 1일 세계 에이즈

의 날을 맞아 감염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행사였다.

에이즈 인권모임 나누리+와 인권단체들 주축로 열린 이날 추모행사에서 이들은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들이 질병으로 사망하기 전에 이미 차별과 낙인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사망선고를 받고 있다"며 죽음조차 숨길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책임은 감염인에 대해 감시와 통제만 일관해 온 정부에 있음을 선언했다.

행동하는 의사회 회원인 미류 씨는 "이번 행사가 감염인 인권의 사망을 선고하는 자리였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사회에 감염인 인권이란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가족에게 감염사실을 통보하여 가출하게 된 사람, 감염인이었던 아버지가 죽고 난 후 이웃의 냉대와 멸시를 견뎌야했던 자녀들, 감염사실을 알게 된 후 누군가 자신을 가두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치료도 받지 못하고 도망 다니다 하반신 마비까지 얻게 된 감염인, 이런 사례들은 아직까지 안타까움의 대상일 뿐 우리 사회는 이들에 대해 부당하게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류 씨의 설명이다.

에이즈 인권모임 나누리+ 윤호재(가명) 대표는 3년 전 떠나보낸 친구에게 추모사를 하며 "아직도 얼굴을 드러낼 수 없어 검은 천을 쓰고 너의 영정 앞에서는 걸 용서해 달라"며 울먹였다. 윤 대표는 "매년 에이즈의 날이면 에이즈 환자들의 희망의 상징인 레드리본을 달지만 감염인들의 치료접근권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와 노동권 등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레드리본을 달 수 없었다"며 이러한 인권침해가 감염인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감염인의 인권을 알리기 위해 최근 'HIV/AIDS 인권지침서'를 발간, 배포했으며, 지난달 27일에는 '에이즈 인권 시민 캠페인'을 진행했다.

<기사 처음으로>

<기획>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③ 한국에바라지

노조 설립의 대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의 한국에바라지회에는 노조원이 3명이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노조를 설립했을 당시, 조합원은 27명이었고 60명 가량 되는 생산현장에서 27명은 적은 수가 아니었다. 그만큼 노동자들은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 폭넓게 공감하고 있던 것.

한국에바라지정밀기계는 반도체 관련 설비를 담당하는 일본계 회사로 경기도 평택 송탄에 공장을 두고 있는 다국적 회사다. 노조를 설립하기 전 보통 7명이 일하는 작업 공정에 3명이 일하는 등 회사가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아 한 달에 100시간 이상 잔업에 시달렸다. 또한 하루 2교대로 12시간씩 일하면서도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고, 잔업수당도 48시간까지만 지급받았다. 48시간 초과잔업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불법이기 때문이다. 한국에바라지회 황상진 지회장은 "돈보다 사람이 건달 수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인원 증원'을 요구하며 2003년 6월 18일 노조를 설립했다.

사측의 탄압은 가혹했다. 사측은 교섭을 해태하며 조합원들에 대해 부당 인사이동을 실시했다. 8월 7일에는 윤세훈 조직부장이 인사 이동되었고, 9월 1일에는 황 지회장이 서울로 진출했다. 한 수습사원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되기도 했다. 회사는 "노조를 만들면 공장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했고, 원청 중 하나인 삼성의 '무노조 경영' 정책을 대며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 실제로 삼성에서 외근을 하던 황 지회장을 비롯한 5명의 조합원은 모두 노조 설립 후 삼성에서 '쫓겨나' 다른 곳으로 진출했다. 이후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이 끝난 2003년 9월 25일 황 지회장을 중심으로 '합법파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측은 12월 10일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그것도 15명의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직장폐쇄'였다. 황 지회장은 "이건 '직장폐쇄'도 아니지만 '불법'도 아닌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전했다. 조합원들의 작업공정만 '직장폐쇄'하고 그 자리에는 불법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회사는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일본과 대만 등에서 무비자 혹은 관광비자로 들어온 기술자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했고, 무허가 불법 용역 업체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기도 했다. 2004년 6월 법원이 이러한 대체인력 투입을 '불법'으로 판정하자 회사는 대체인력을 철수하는 대신 '아르바이트'를 투입했다. 황 지회장은 "법원이 다시 '아르바이트'를 불법으로 판정해도 회사는 차라리 벌금을 내는 쪽을 택할 것"이라며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벌금이 고작 100~300만원이라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노조탄압을 둘러싼 사측의 인권침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노조 설립 후 회사는 경비실 위에 CCTV 2대를 설치해 출입하는 사람들을 '감시'했고, 2004년 1월 6일에는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여권을 돌려달라는 노조원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황 지회장은 "일본으로 출장 갈 기회가 많다는 이유로 회사가 일괄적으로 여권을 보관하고 있었다"며 "당시에는 그게 불법인지도 몰랐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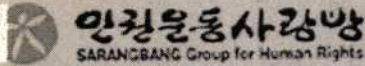
노조는 '합법 파업'을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지회장을 포함한 5명이 구속됐다. 사측이 대체인력 투입을 막는 노조원들을 '업무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황 지회장은 "대체인력 투입을 막은 것은 회사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 사측 증인을 때리지 않았다는 건 그도 법정에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은 3명으로 줄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다른 조합원들은 '어쩔 수 없이' 노조를 탈퇴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회사는 현재 남은 3명의 조합원들에게도 "노조를 탈퇴하기만 하면 현장에 복귀시켜주겠다"고 회유를 계속하며 노조 탈퇴에만 열을 올릴 뿐 교섭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면 상급노조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해고'도 시키지 않는다. 황 지회장은 이를 '피말려 죽이기 작전'이라며 "사실상 우리는 회사에서 쫓겨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투쟁이 길어지다보니 빛만 늘어간다. 노조를 탈퇴하고 복귀한 조합원들도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비록 3명이 남았지만 황 지회장은 "조합원 신분으로 현장에 복귀하겠다"고 '민주노조 사수'의 의지를 밝히며 출근투쟁과 일본대사관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2월 03일 (금)
제 271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전범민중재판 막 올라
2. "총파업은 끝나지 않았다"
3. 인권의 증진인가? 억압인가?
4. <알림 1> 이라크인 살람, 하이셈의 이라크전쟁 증언대회
5. <알림 2> 열여섯번째 인권콘서트 '깨어나 일어나'

전범민중재판 막 올라

"민중의 손으로 심판"...청와대 소환장 거부

국민들의 반전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파병 연장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 전쟁 피해의 책임을 묻는 전범 민중재판이 발의되었다.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준비위원회는 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재판 설립과 전쟁범죄 기소운동을 함께 한 2856명의 이름으로 부시-블레어-노무현을 전범으로 기소한다"며 이라크 전범 민중재판의 막을 올렸다. 평화유랑단 문정현 신부는 "부시의 명분 없는 침략전쟁으로 무고한 사람이 죽었고, 한국 정부는 그들도 파병하여 전범국가의 국민이라는 치욕적인 칭호를 얻게 되었다"며 "인류의 보편적 양심을 거스르는 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들을 민중의 손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라크의 전쟁피해를 증언하기 위해 한국으로 온 이라크인 살람 씨와 하이셈 씨가 참석했다. 살람 씨는 "이라크의 상황은 정말 처참하다. 특히 팔로자 공격이 시작되고 나서 더욱 그렇다. 월 4천명의 사람이 죽고 있다"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전쟁을 멈추기를 원한다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살람 씨와 하이셈 씨는 2일부터 5일까지 대구, 대전 등을 돌며 '이라크 전쟁피해자 증언대회'에서 몸소 체험한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이날 판사단 이정우 법정 수석판사는 기소장을 수락하고 피고인 부시, 블레어, 노무현 대통령에게 피고 소환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소환장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한 기소인 대표단과 법원 서기단은 경찰에 의해 5미터도 건지 못하고 바로 저지되었다.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는 "이 서류는 일반 민원과 다르기 때문에 접수할 수 없다. 대통령에서 소환장을 전달한 전례가 없다"며 대표단을 가로막고 공식적으로 접수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소환장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간 미국 대사관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경찰 병력은 "더 있으면 체포해버리겠다"고 대표단을 둘러싸고 위협하며 대사관 방문을 가로막았고, 대사관은 기소인단과의 통화를 회피하며 소환장을 받지 않았다.

이에 전범재판의 수석 판사인 이덕우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해 파병을 결정했던 것이라면 국민의 요구로 열린 민중재판장에 출석해서 당연히 변론을 펼치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7시 고려대학교에서는 전범민중재판 여성 기소인 총회가 열렸다. 이들은 "이라크 전쟁뿐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여성에 대해 자행되는 폭력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라며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하고, 부시-블레어-노무현 대통령을 전범으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전범민중재판은 7일 저녁 7시 연세대 백양관에서 열리는 1차 공판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을 시작으로 9일 3차 공판까지 진행된 후, 11일 선고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기사 처음으로>

"총파업은 끝나지 않았다"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일단 마무리

국회 내 타워크레인 위에서 7일 동안 진행된 '고공농성'이 정부의 법안 처리 연기 방침으로 사실상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단' 마무리됐다.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아래 전국비정규연대회의)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개악안 완전철폐와 권리입법 쟁취라는 전선을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고공농성단은 이제 맡은 바 소임을 다 했으며 총파업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의 환영 속에 땅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민주노총 '비정규권리보장·공무원노동3권·개혁입법쟁취 결의대회'에서 타워크레인 위에 있는 전국타워크레인노조 이수중 위원장은 전화 통화를 통해 "비록 법안을 철회시키지는 못했지만 전체 노동자가 연대해서 반드시 비정규직을 철폐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오후 5시 반 경, 타워크레인 위에서 농성하던 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타워크레인을 내려왔고, 바로 노랑진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사실상 비정규직을 전 업종으로 확산하는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발표했다가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며 강력히 반발하자 국회 환경노동위는 법안 처리를 유보하고 오는 6~7일 공청회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수습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국비정규연대회의는 "국회 환노위의 결정은 법안 처리의 '잠정 유보'일 뿐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전선을 교란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언제든지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계속적인 투쟁을 주장했다. 또한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에 대해 "총파업 투쟁전선을 법안의 '유보'가 아닌 '완전 철폐'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라는 성격으로 명확히 했다"고 성과를 평가하며, "비정규노조 최초의 총파업과 고공농성의 성과를 담아 2차 총파업 조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는 지난 24일 간부파업을 거쳐 26일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을 하루 앞둔 2일, 민주노총,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48개 사회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철도현장에서는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24시간 맞고대로 월 270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1년에 30여명의 노동자가 죽어간다"며 "철도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은 대형 철도사고를 예방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파업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철도노사는 2002년 노사공동경영진단을 통해 3조2교대로 근무체계를 개편하기로 했고, 2003년에는 4.20 합의를 거쳐 6천5백여 명의 인력을 충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 공사 전환을 앞두고 철도청은 지난해 합의한 인력충원 방안조차 부정하고 있다. 결국 지난 29일 철도노조가 주40시간제에 따른 인력충원을 내년까지 유보하며 기존의 8,938명의 인력충원 요구도 내부 관리직의 감축을 통한 5,215명의 인력충원 방안을 수정·제안했지만 철도청은 여전히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결국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철도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며 "철도청과 정부는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기사 처음으로>

인권의 증진인가? 억압인가?

북인권 국제심포지엄, 상반된 견해차... 힘겨운 해법

"소위 인권옹호자라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북한의 기아를 다른 인권침해와 한 덩어리로 취급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온 '푸드 퍼스트'의 경제사회 프로그램 팀장 크리스틴 안은 북인권에 대한 잘못된 접근을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6월 평화사절단으로 북을 방문한 크리스틴 안은 "북은 여전히 식량과 전기 등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고, 북의 고위급 군인이나 비무장지대 장군들조차 마른 몸에 험한 옷을 입고 있는 등 전 사회 계층이 식량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말 국제사회가 그들의 절박한 문제에 순수한 도움을 주었느냐?"고 반문하는 그녀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북의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매 파 보수주의자들과 강압적 기독교 신자들이 노력한 결과이며 인권을 위한 투쟁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나 '북인권 문제의 정치적 도구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참가자들 사이에서 편향을 드러냈다. 미의회를 상대로 입법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바른 입법을 위한 친구들' 위원회(FCNL)의 선임집행위원 카린 리는 "북인권 개선과 북의 정권교체는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인권을 가장 큰 가치로 표방하면서도 이라고 포로 학대 등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이 인권개선을 위해 북주민에게 '라디오 보급'을 지원하고 있는 것 등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인권 현실의 상당한 개선과 북정부의 개방을 미국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는 목적에는 기대를 보여 미국이 다른 나라의 문제에 국내법으로 개입하는 것에 문제삼지 않았다. 북주민의 '자결권'은 간파하는 모습인 것이다. 휴먼라이츠워치의 공보관 탐 말리놉스키는 이에 더해 "북한인권법이 도발적 의도는 없는 것이며 인권이 개선되어 북의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이 비추게 해야 한다"고 북한인권법을 옹호하기도 했다.

한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윌릿 문타폰은 특별 연설문을 통해 그동안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어온 견해를 밝혔다. 먼저 북이 인권개선에 긍정적인 행보를 보여왔다는 것을 적시했는데 "자유권 및 4개 규약에 가입 및 보고서 제출, 외부의 인권활동가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자국에 입국하는 것을 간헐적으로 허용했다는 것과 함께 1992년과 1998년 헌법과 여타 법률 개정 등 인권 보호와 증진에 도움이 되는 법적·조직적 토대"를 갖추고 있다고 긍정성을 평가했다.

그가 구체적 과제로 제출한 것은 식량권과 개인의 안보권 및 인도적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법정의 등 자유권의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결론은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증진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것이다.

'탈북자문제' 역시 이날 핵심쟁점 중에 하나였다. "탈북자는 경제적 유민인가, 정치적 난민인가" "탈북자의 규모는 얼마 만큼인가?" "탈북자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민주노동당의 최규업 최고위원은 "탈북자는 경제유민이라고 봐야 하며 그 숫자도 3만명 정도"라고 밝힌 반면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요시다 야스히코(오사카 대학 교수) 씨는 20만 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정치적 박해를 피해 북에서 탈출하고 있다"고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이날 참석하기로 예정된 중국 인권연구협회 사무총장은 발제문만 보내고 불참해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인권위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이 심포지엄이 향후 인권위가 '북인권'에 대한 정책 권고'를 할 때 참고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히며 발제와 토론의 내용은 인권위의 입장과 무관함을 재삼 강조하기도 해, 인권위가 매우 조심스럽게 '북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입증하기도 했다.

<기사 처음으로>

<알림 1> 이라크인 **살람 하이셈**의 이라크전쟁 증언대회

- ▶ 일시 : 12월 3일(금) 오후 7시
-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 주최 : 전범민중재판준비위원회

<기사 처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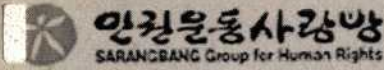
<알림 2> 열여섯번째 **인권콘서트 '깨어나 일어나'**

- ▶ 일시 : 12월 4일(토) 오후 5시
- ▶ 장소 : 한양대 올림픽 체육관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2004년 12월 04일 (토)
제 271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첨단기술로 찾아온 빅브라더
 2. 민법에 가족개념 필요없다
 3. 인권교육은 '없었다'
 4. 평화의 비로 바그디드를 적셔요

<논평>첨단기술로 찾아온 빅브라더

최근 우리는 뜻하지 않았던, 그러나 예견된 빅브라더와의 끔찍한 만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 수능 부정 사건에서 경찰이 보인 무차별적 수사는 첨단 과학기술과 그들의 일관한 인권감수성이 조화를 이룬 경악스런 결과이다. 수능시험 당일 전송된 2억 건이 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중 5이하의 숫자로 된 24만 여건을 이동통신사로부터 넘겨받았다고 한다. 경찰이 29일 수능 부정행위가 의심된다고 발표한 5백 여건의 문자메시지는 이 24만 여건의 문자메시지에서 추려낸 것이다.

2억 여건! 문자메시지 한 건당 한 사람으로 셈할 수는 없지만, 이토록 많은 사람이 일시에 범죄혐의자로 취급된 적은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경찰에게 5이하의 문자메시지를 넘겨주라고 영장을 발부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은 정당한 법집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능'을 둘러싼 온 국민의 뜨거운 이목에 '별 것 없을 것같은 숫자 몇 개 되져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말인가? '2억 여건쯤이야!' 하고?

경찰의 편의주의적 발상도 문제이지만 법원이 어떻게 이런 무작위 수사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 허탈할 뿐이다. 인권보호를 위해 채택된 영장주의를 법원 스스로가 무색하게 만든 어이없는 사건이다. 게다가 이동통신사는 이용자의 동의도 없이 문자메시지를 수일에서 수십일간 보관해오다 이번 수능 사건에서 들통이 났다. 법적 근거도 없이 그들이 그 많은 개인의 문자메시지를 지금까지 보관해왔고, 수사당국은 '영장'이라는 합법으로 개인의 정보를 조사해왔다는 말이다. 인권감수성은 제쳐두고, 이들의 인권불감증에 놀랄 뿐이다.

기술을 발판으로 삼아 상황의 심각성을 무기로, 정의를 목적으로 범죄소탕에 나서는데 빅브라더에 의해 무시되는 기본적인 권리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땅히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철저한 정비가 뒤따라야겠지만, 합법으로 자행된 이번 수능 부정 사건 수사를 겪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인권의 눈'이 질실함을 깨닫는다.

<기사 처음으로>

민법에 가족개념 필요없다

민법개정안 공청회, 낡은 가족개념과 신분등록제 지적

국회 법사위는 3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여성계, 학계,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법사위에는 정부,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제출한 3개 민법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이며, 공청회에는 이 3개 법안의 차이가 비교·검토됐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정부의 개정안 중 '가족'에 대한 개념규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은 호주에 대한 규정과 호주제를 없애고 가족개념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김현웅 법무심의관은 "가족규정 삭제가 가족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일부 우려를 감안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족개념 규정을 두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 권순형 법정심의관은 "민법에서 가족 개념을 삭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가족은 경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변해왔고 범위가 불명확해 법률로 개념화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국가족법학회 이송우 씨도 "호주제가 폐지될 때 없어지는 가족은 현실의 가족이 아니라 현실과 유리된 법 상의 추상적 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숙 의원과 노희찬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가족에 대한 개념이 삭제되어 있다.

또다른 쟁점은 자녀가 누구의 성과 본을 따르나이다. 정부안과 이경숙 의원안은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노 의원은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함에 있어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인순 씨는 "부성원칙주의는 성평등 원칙에 어긋나지만 제한적으로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는 조항이 있으므로 부계혈통주의의 변화와 함께 모성을 사용하는 가족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적제의 개편도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 정부안에는 호주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2년 안에 호적부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하도록만 되어 있어 사실상 호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분공시 방법인 호적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권순형 법정심의관은 "호주제 폐지 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대안으로 △개인별 편제방식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목적별(사건별) 공부방안 △주민등록과 일원화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최소 3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도입 예산으로 개인별 편제방식의 경우 대략 230억, 목적별공부방안의 경우 대략 320억이 든다고 밝혔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3개 민법개정안은 6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통합심의될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인권교육은 '없었다'

인권교육네트워크, 1기 인권위 인권교육 평가

국가인권위원회의 2기 출범을 앞둔 11월 30일,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인권교육네트워크는(아래 네트워크) 1기 인권위 인권교육을 신랄히 평가했다. 이들은 "인권교육담당관실이 지난 3년간 걸어온 길은 시행착오의 연속으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1기 인권위에 인권교육은 '없었다'"고 한마디로 총평했다.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인권교육담당관실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심지어 인권교육이 아닌 사업들을 '인권교육'의 이름으로 진행함으로써 인권교육에 대한 오해와 혼란만을 가중시켰다고 인권단체들은 평가했다. 실제 인권위가 인권교육 연구학교로 선정한 한 초등학교에서는 인권 일기를 뽑아 시상하고, '도서관에서 자면서 침을 흘리지 않는다'는 등 인권과 무관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인권교육의 원칙인 '참여형 교육'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채 범 조항 중심의 일회성, 주입식 강연 위주로 인권교육 강사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네트워크는 "인권교육담당관실이 인권교육과 아닌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내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이들과의 교류와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권담당관실의 인권교육이 체계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당장의 실적내기에 치중해 최소한의 성과조차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인권단체들은 입을 모았다. 네트워크는 법집행과 학교 분야를 대상으로 인권위가 9월부터 실시한 '인권교육 강사 능력향상과정' 교육에 대해 앞서 7월에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론에 대한 충실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계획을 내실 있게 만들어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인권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사업을 강행했다. 결국 교도관들 교육에서 강사가 현재 감육의 상황을 잘못 전달해 참가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교육이 형편없었다"는 평가를 듣는 등 '부실한'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하지만 11월 24일 인권위는 '출범 3주년에 즈음하여'라는 보도자료에서 "인권교육을 통해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했다"며 자화자찬했으며, 토론회에 참석한 인권교육담당관실 김철홍 과장도 "인권단체들이 지적한 문제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인권'이라는 단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제공함으로써 교육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해 인권의식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대해 네트워크는 "2기 인권위가 1기를 그대로 답습하는 한 인권위 인권교육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으며 이어 "민간 인권교육 진영이 그동안 쌓아온 성과를 인권위가 받아 안기 위해서는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전 과정에 걸쳐 인권단체들과 인권교육가들의 의견과 자문을 구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기사 처음으로>

평화의 비로 바그다드를 적셔요

반딧불, 전쟁 피해자들 만난다

현재진행형인 이라크 전쟁에서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목표로 한 침략군의 무차별한 폭격이 자행되는 가운데, 이라크 민중들의 눈과 마음에 주목하는 카메라를 든 이는 목숨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 잔혹한 현실이다. 침략군의 보호를 받는 소수 주류 미디어 이외의 카메라는 이라크 민중들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기에, 이라크에 깔린 암흑의 농도를 가능하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이라크 여성들은 이라크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가부장적 공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경험을 발설하지조차 못한다. '전쟁'마다 증폭되는 여성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폭력은 이라크에서도 여지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게 감춰진 현실이다.

12월 반딧불에서는 '평화의 비로 바그다드를 적셔요'라는 주제로 이라크 민중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용이 아닌 꽃으로 화답할 수 있는 행동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바그다드의 이야기>는 미국이나 주류 매체들이 외면하는, 이라크 민중의 시점에서 바그다드의 현재를 보여준다. 이는 대부분의 서구 미디어나 몇몇의 아랍 매체가 보여주는 이라크의 상황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담 후세인 정권의 축출에 안도감을 느끼는 한편, 그들이 다시 식민지화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낙담하기도 한다.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역사에서 무시되었던 사람들, 미디어와 권력에 의해 무시되었던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담고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이라크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것과 함께, 이 영화는 바그다드에서 고통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과 기본적인 의약품도 없이 치료를 해야 하는 의사들, 그리고 모두 불타 없어진 대학 도서관, 인적이 끊긴 바그다드의 거리. 이라크 사람들의 인터뷰는 13년 동안 계속된 UN의 제재조치가 이라크의 현재 상황을 초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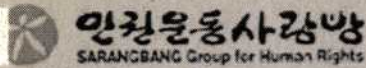
함께 상영되는 <유령을 부르며>는 92년 보스니아 강간캠프의 끔찍한 실상을 알리면서, 전쟁이 불러온 억압의 기억을 새로운 힘으로 전환시킨 여성들의 활동을 되새긴다. 영화 상영 후에는 이라크 전쟁피해자들을 초청해 증언을 들어보고,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함께 고민해 볼 예정이다.

매외곳: 12/10(금) 연세대학교 광복관 B105
 상영작: 1)늦은 5시 <유령을 부르며>, 7시 <바그다드의 이야기>
 문의: 02-741-5363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김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2월 07일 (화)
제 271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국보법 폐지 사생결단!
2. 공무원 노조죽이기 '2탄'
3. ● 미녀의 인권이야기 ○ '우리'라는 벽
4. 주간인권흐름
5. <알림> 전범민중재판 일정

국보법 폐지 사생결단!

각계 300인 단식 농성...폐지안 법사위 상정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를 향한 국회 안팎의 투쟁이 치열하다. 6일 국회 앞 농성장에서는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촉구하며 300명의 사람들이 생사를 걸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국보법 폐지 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정됐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국회 앞에서 '국보법 끝장 국민단식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국보법에 의해 구축된 냉전수구, 반인권, 반민주의 질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보법이 죽느냐, 내가 죽느냐는 각오로 국보법 폐지투쟁의 마지막 깃발을 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한나라당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세 차례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며 국보법 폐지안의 법사위 상정을 지연시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56인의 사발식에 이어 한 겨울 집단 노상 단식농성에 이르게 된 것.

국민연대 배재군 공동운영위원장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적대시하며 적과 아군을 나누는 흑백논리를 깨지 않는 한 민주주의와 인권은 먼 얘기일 뿐"이라며 "올해가 국보법 폐지 투쟁의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민단식단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자, 농민, 여성, 학생, 활동가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구성됐다. 울산지역에서 50명의 활동가, 단체회원들과 함께 농성에 참여한 울산연합 이은미 집행위원장은 "우리가 작심하고 나서지 않는다면 국보법 폐지의 기회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며 "국보법을 폐지시켜 연말에 멋진 송년회를 함께 하자"고 밝혔다.

이들은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까지 국보법이 폐지되지 않으면 단식 농성단을 10일에는 560명으로, 그리고 임시국회 막바지인 20일 이후에는 1천명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임시국회에서 국보법 폐지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18일에는 '국보법 폐지 전국총력집중투쟁대회'가 준비되어 있다.

한편 오후 4시 15분경, 국보법 폐지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국보법 폐지를 위한 의회 절차의 첫 단계를 넘어섰다.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사회권을 발동해 국보법 폐지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한 것. 하지만 한나라당은 '날치기' 상정이라며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대는 생명을 발표해 "한나라당은 국보법의 법사위 상정 자체를 무효라고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자초한 정치적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며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는 법마저도 아예 개폐 논의조차 못한다는 정당이 무슨 법사위의 지엽적인 절차를 두고 비난을 할 수 있는나"고 비판했다.

<기사 처음으로>

공무원 노조죽이기 '2탄'

정부가 또다시 공무원노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6일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아래 개

정안)을 만들어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종전에는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징계수위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할 수 있도록 한 단계씩 높였다. 또한 '정치운동금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고 '집단행동위반'과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은 '공무원노동자 죽이기 2탄'이라고 규탄하며 당장 법개정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월 민주노동당지지 선언에 대해 "와신상담의 심정으로 '정치선언'을 한 것은 반세기 동안 독재권력에 맞서 진정한 국민의 권리를 위해 저항하지 못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온갖 관권선거,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려 왔던 부끄러운 과거를 국민 앞에 반성하면서 빼앗겼던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인간선언'이었다"고 밝히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봉쇄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규탄했다.

또한 이 개정안이 속해 있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아래 공무원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법은 40여 년 전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독재의 잔재가 뿌리깊게 박혀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할 법이며 이에 속한 규칙은 공무원들을 권력의 시녀로 몰아매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공무원노조특별법'과도 관련이 있는데 공무원노조는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 법령을 개정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총파업과 관련해 5일까지 파면 91명, 해임 126명, 정직 192명 등 409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항의하며 국회 앞에서 7일째 '지도부 단식농성'과 9일째 '본부 릴레이 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 미니의 인권이야기 ● '우리'라는 벽

기억 속에 없는 사실

장면1: "6명의 대원이 어머니, 오빠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17살 소녀를 윤간하고는 그녀를 묶어 불 속에 던져버렸다" "14명의 잔자위드 대원이 한 학교의 41명 소녀와 여성교사를 집단으로 강간했다"

-2003년 초부터 수단의 다르푸르 지역에서 벌어진 대량학살과 집단강간에 관한 증언 가운데

장면2: 책가방을 매고 학교로 가고 있던 '이만 알 함스'라는 13살 난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이스라엘군이 조준사격 해 살해하는 것도 모자라 탄창이 떨어질 때까지 '확인사살'하여 아이의 몸에 총 20개의 총알이 박히는 사건이 벌어졌다.

다르푸르라는 지역이 아프리카의 수단이라는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라도나 경상도와 같이 한국의 어느 한 지역이었다면 한국의 인권운동은 무엇을 했을까? 수만명이 학살당하고, 수천명의 여성이 "검둥이는 모두 없애버려야 돼"와 같은 소리를 들으며 강간당하고, 지금도 1백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난민으로 주변국을 떠돌고 있다면 한국 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책가방 매고 학교로 가다가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 죽은 것도 모자라 '확인사살'로 몸에 20발의 총알을 맞고 죽은 13살 난 사람이 '이만 알 함스'라는 팔레스타인이 아니고 김아무개 씨라는 한국 사람이었다면 한국 사회는 이 사건을 무어라 말했을까?만

약 '이만 알 함스'가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었다면 한국 사회는 발각 뒤집혀서 죽은 사람을 추모하고, 살인자 집단에 대해 진상규명과 공개사과 등을 요구하며 싸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않는다. '미선·효순' 사건 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다. 왜 그럴까? 왜 군사 폭력으로 사람들이 죽었는데 누구는 기억되고 누구는 기억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라는 벽 때문이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미선·효순'이나 '이만 알 함스'와 단 한번도 얼굴을 맞댄 적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같은 국적과 민족인 사람들은 '우리'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목숨과 인권의 가치를 다르게 매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닌' 것을 잊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제 한국사회도 한 민족만이 '우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국적과 민족의 차이를 넘어 인류 보편의 인권과 평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우리 안에 작은 실천이 바로 '우리가 아닌' 벽을 허물 수 있다. 매주 화요일 12시에 열리는 이스라엘 대사관 앞 캠페인, 그리고 이스라엘 상품 불매운동 등 지금은 작지만 이러한 행동들이 하나하나 모여 우리를 넘어선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미니 님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2004년 11월 30일 ~12월 6일)

1. 지금, 국회 앞 농성장에선...

한때 열우당 국보법 연내 처리 유보 결정...국보법폐지국민연대, 기자회견 열어 "국보법 반드시 올해 안 폐지" 주장(11.29)/ 국보법 피해자들 "국보법은 평범한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히는 악법"이라며 법사위 상정 촉구...열우당 천정배 원내대표와의 면담 좌절/ 40여 명 국회 본관 앞에서 '국보법 폐지' 기습시위로 전원 연행(11.30)/ 국보법 제정 56년 맞아 '국보법 완전폐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66명 삭발/ 민족의 화해와 국보법 폐지 기독교운동본부, '국보법 폐지 기독교 금식기도회' 진행/ 국보법폐지부산연대, 열우당 부산시당 점거(12.1)/ "비정규직 관련법안 철회" 주장하며 국회 타워크레인에서 고공농성 벌이던 노동자 4명, 농성 마무리(12.2)/ 제12차 세계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 공동농성단', '장애인 차별철폐 결의대회' / 이라크인 살람, 하이셈 씨 국회에서 '전쟁피해자 증언대회' 열어(12.3)/ 각계각층 300인 '국보법 폐지' 위해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국보법 폐지 관련 법안 천신만고 끝에 국회 법사위 상정(12.6)

2. 문자메시지도 위험하다

서울 경찰청, '수능부정' 조사한다며 수능 당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검색(11.29)/ 전교조, '수능부정' 관련 성명 통해 "수능시험 자격시험으로 바뀌라" 주장(11.30)/ 인권·사회단체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은 영장주의 위반"이라며 항의 성명 발표/ 검찰, '문자+숫자' 메시지 압수수색영장 기각/ 이동통신사, 문자메시지 내용 보관 않기로 결정(12.2)/ 경찰, '문자+숫자' 메시지 다시 압수수색영장 발부 받아 조사 실시(12.4)

<기사 처음으로>

<알림> 전범민중재판 일정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원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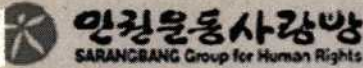
부시·블레이어·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일정

- ▶ 1차 재판 -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12월 7일(화) 오후 6시 30분~10시/ 연세대 백양관 대강당
- ▶ 2차 재판 -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
12월 8일(수) 오후 6시 30분~10시/ 연세대 백양관 대강당
- ▶ 3차 재판 - 파병으로 인한 한국 거주민의 권리침해
12월 9일(목) 오후 6시 30분~10시/ 연세대 백양관 대강당
- ▶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 - <유령을 부르며>, <바그다드의 이야기>
12월 10일(금) 오후 5시, 7시/ 연세대 광복관 B105
- ▶ 선고재판 및 문화제 - 부시·블레이어·노무현에 대한 최종논고와 판결
12월 11일(토) 오후 3시~10시/ 경희대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2월 07일 (화)
제 271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국보법 폐지 사생결단!
 2. 공무원 노조죽이기 '2탄'
 3. ● 미나의 인권이야기 ○ '우리'라는 벽
 4. 주간인권흐름
 5. <알림> 전범민중재판 일정

국보법 폐지 사생결단!

각계 300인 단식 농성...폐지안 법사위 상정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를 향한 국회 안팎의 투쟁이 치열하다. 6일 국회 앞 농성장에서는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촉구하며 300명의 사람들이 생사를 걸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국보법 폐지 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정됐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국회 앞에서 '국보법 끝장 국민단식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국보법에 의해 구축된 냉전수구, 반인권, 반민주의 질서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보법이 죽느냐, 내가 죽느냐는 각오로 국보법 폐지투쟁의 마지막 깃발을 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한나라당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세 차례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며 국보법 폐지안의 법사위 상정을 지연시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56인의 삭발식에 이어 한 겨울 집단 노상 단식농성에 이르게 된 것.

국민연대 박래군 공동운영위원장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적대시하며 적과 아군을 나누는 흑백논리를 깨지 않는 한 민주주의와 인권은 먼 얘기일 뿐"이라며 "올해가 국보법 폐지 투쟁의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민단식단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자, 농민, 여성, 학생, 활동가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구성됐다. 울산지역에서 50명의 활동가, 단체회원들과 함께 농성에 참여한 울산연합 이은미 집행위원장은 "우리가 각심하고 나서지 않는다면 국보법 폐지의 기회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며 "국보법을 폐지시켜 연말에 빚진 송년회를 함께 하자"고 밝혔다.

이들은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까지 국보법이 폐지되지 않으면 단식 농성단을 10일에는 560명으로, 그리고 임시국회 막바지인 20일 이후에는 1천명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임시국회에서 국보법 폐지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18일에는 '국보법 폐지 전국총력집중투쟁대회'가 준비되어 있다.

한편 오후 4시 15분경, 국보법 폐지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국보법 폐지를 위한 의회 절차의 첫 단계를 넘어섰다.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사회권을 발동해 국보법 폐지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한 것. 하지만 한나라당은 '날치기' 상정이라며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대는 생명을 발표해 "한나라당은 국보법의 법사위 상정 자체를 무효라고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자초한 정치적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며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는 법마저도 아예 개폐 논의조차 못한다는 정당이 무슨 법사위의 지엽적인 절차를 두고 비난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기사 처음으로>

공무원 노조죽이기 '2탄'

정부가 또다시 공무원노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6일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아래 개

정안)을 만들어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중전에는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징계수위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할 수 있도록 한 단계씩 높였다. 또한 '정치운동금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고 '집단행동위반'과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은 '공무원노동자 죽이기 2탄'이라고 규탄하며 당장 법개정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월 민주노동당지지 선언에 대해 "와신상담의 심정으로 '정치선언'을 한 것은 반세기 동안 독재권력에 맞서 진정한 국민의 권리를 위해 저항하지 못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온갖 관권선거,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려 왔던 부끄러운 과거를 국민 앞에 반성하면서 빼앗겼던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인간선언'이었다"고 밝히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봉쇄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규탄했다.

또한 이 개정안이 속해 있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아래 공무원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법은 40여 년 전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독재의 잔재가 뿌리깊게 박혀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할 법이며 이에 속한 규칙은 공무원들을 권력의 시녀로 몰아매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공무원노조특별법'과도 관련이 있는데 공무원노조는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 법령을 개정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총파업과 관련해 5일까지 파면 91명, 해임 126명, 정직 192명 등 409명이 중징계를 받았으며,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항의하며 국회 앞에서 7일째 '지도부 단식농성'과 9일째 '본부 릴레이 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 미니의 인권이야기 ○ '우리'라는 벽

기억 속에 없는 사실

장면1: "6명의 대원이 어머니, 오빠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17살 소녀를 윤간하고는 그녀를 묶어 불 속에 던져버렸다" "14명의 잔자위드 대원이 한 학교의 41명 소녀와 여성교사를 집단으로 강간했다"

-2003년 초부터 수단의 다르푸르 지역에서 벌어진 대량학살과 집단강간에 관한 증언 가운데

장면2: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가고 있던 '이만 알 함스'라는 13살 난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이스라엘군이 조준사격 해 살해하는 것도 모자라 탄창이 떨어질 때까지 '확인사살'하여 아이의 몸에 총 20개의 총알이 박히는 사건이 벌어졌다.

다르푸르라는 지역이 아프리카의 수단이라는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라도나 경상도와 같이 한국의 어느 한 지역이었다면 한국의 인권운동은 무엇을 했을까? 수만명이 학살당하고, 수천명의 여성이 "검둥이는 모두 없애버려야 돼"와 같은 소리를 들으며 강간당하고, 지금도 1백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난민으로 주변국을 떠돌고 있다면 한국 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책가방 메고 학교로 가다가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 죽은 것도 모자라 '확인사살'로 몸에 20발의 총알을 맞고 죽은 13살 난 사람이 '이만 알 함스'라는 팔레스타인이 아니고 김아무개 씨라는 한국 사람이었다면 한국 사회는 이 사건을 무어라 말했을까?만

약 '이만 알 함스'가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었다면 한국 사회는 발각 뒤집혀서 죽은 사람을 추모하고, 살인자 집단에 대해 심상규명과 공개사과 등을 요구하며 싸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조차 기억하지 않는다. '미선·효순' 사건 배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다. 왜 그럴까? 왜 군사 폭력으로 사람들이 죽었는데 누구는 기억되고 누구는 기억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라는 벽 때문이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미선·효순'이나 '이만 알 함스'와 단 한번도 얼굴을 맞댄 적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같은 국적과 민족인 사람들은 '우리'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목숨과 인권의 가치를 다르게 매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닌' 것을 잊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제 한국사회도 한 민족만이 '우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국적과 민족의 차이를 넘어 인류 보편의 인권과 평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우리 안에 작은 실천이 바로 '우리가 아닌' 벽을 허물 수 있다. 매주 화요일 12시에 열리는 이스라엘 대사관 앞 캠페인, 그리고 이스라엘 상품 불매운동 등 지금은 작지만 이러한 행동들이 하나하나 모여 우리를 넘어선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미니 님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2004년 11월 30일 ~12월 6일)

1. 지금, 국회 앞 농성장에선...

한때 열우당 국보법 연내 처리 유보 결정...국보법폐지국민연대, 기자회견 열어 "국보법 반드시 올해 안 폐지" 주장(11.29)/ 국보법 피해자들 "국보법은 평범한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히는 악법"이라며 법사위 상정 촉구...열우당 천정배 원내대표와의 면담 좌절/ 40여 명 국회 본관 앞에서 '국보법 폐지' 기습시위로 전원 연행(11.30)/ 국보법 제정 56년 맞아 '국보법 완전폐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66명 식발/ 민족의 화해와 국보법 폐지 기독교운동본부, '국보법 폐지 기독교 금식기도회' 진행/ 국보법폐지부산연대, 열우당 부산시당 점거(12.1)/ "비정규직 관련법안 철회" 주장하며 국회 타워크레인에서 고공농성 벌이던 노동자 4명, 농성 마무리(12.2)/ 제12차 세계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 공동농성단', '장애인 차별철폐 결의대회' / 이라크인 살람, 하이셈 씨 국회에서 '전쟁피해자 증언대회' 열어(12.3)/ 각계각층 300인 '국보법 폐지' 위해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국보법 폐지 관련 법안 친신만고 끝에 국회 법사위 상정(12.6)

2. 문자메시지도 위험하다

서울 경찰청, '수능부정' 조사한다며 수능 당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검색(11.29)/ 전교조, '수능부정' 관련 성명 통해 "수능시험 자격시험으로 바뀌라" 주장(11.30)/ 인권·사회단체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은 영장주의 위반"이라며 항의 성명 발표/ 검찰, '문자+숫자' 메시지 압수수색영장 기각/ 이통통신사, 문자메시지 내용 보관 않기로 결정(12.2)/ 경찰, '문자+숫자' 메시지 다시 압수수색영장 발부 받아 조사 실시(12.4)

<기사 처음으로>

<알림> 전범민중재판 일정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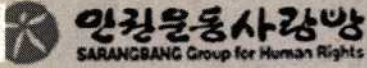
부시·블레이어·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일정

- ▶ 1차 재판 -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12월 7일(화) 오후 6시 30분~10시/ 연세대 백양관 대강당
- ▶ 2차 재판 -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
12월 8일(수) 오후 6시 30분~10시/ 연세대 백양관 대강당
- ▶ 3차 재판- 파병으로 인한 한국 거주민의 권리침해
12월 9일(목) 오후 6시 30분~10시/ 연세대 백양관 대강당
- ▶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 - <유령을 부르며>, <마그다드의 이야기>
12월 10일(금) 오후 5시, 7시/ 연세대 광복관 B105
- ▶ 선고재판 및 문화제 - 부시·블레이어·노무현에 대한 최중논고와 판결
12월 11일(토) 오후 3시~10시/ 경희대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김옥안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2월 08일 (수)
제 2713 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 1.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①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2. > 즐거운 물구나무 < 여성의 이름으로
3. 백지동의안을 묵숨과 바꾸려 하는가
4.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글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①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이라크 침략, 역사의 심판에 올라

"김선일 씨가 피살되던 때 저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얼마 전에 백일이 됐습니다. 아이의 미소를 보며 무한한 행복을 느낍니다"라는 서정명 씨는 "이라크에도 제 아들과 생일이 같은 아이가 있겠지요. 그 아이들이 전쟁 때문에 삶을 마치게 해서는 안되겠지요"라는 물음으로 전쟁범죄를 기소하는 이유를 밝혔다. 서 씨와 같은 3,413명의 기소인의 발기로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민중재판'의 장이 7일 열렸다. 마침 이날 언론은 "미국 정부가 '미국인은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서 세우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수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판에 피고인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전범민중재판 준비위원회가 부시 대통령, 블레어 총리, 노무현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법정 출석을 하지 않은 것. 이덕우 민중재판 수석판사는 유감을 표시하며 변호인단에게 "피고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해주시 바란다"고 주문했다.

변호인 장경숙 씨는 "이라크전은 예상되는 전쟁을 미리 막겠다는 새로운 자위권적 개념의 전술"이라며 "이라크 파병은 '침략'이 아니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철준 기소대리인은 "미국은 '세계평화'라는 관점에서 중동정책을 실시한 적이 없고 이라크 침략은 유엔헌장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증인 정상철 씨(한국외대 중동연구소 교수)는 "냉전시기에는 미국이 중동에서 이라크를 견제하기 위해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지원했고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대량의 무기를 이라크에 지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동정책의 변화와 함께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빌미로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지만 이라크에는 이미 대량살상무기가 없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외국인들도 1차 심리에서 증인으로 출두해 눈길을 끌었다. 이라크에서 온 하이셀 카심 알리 씨는 한국군 파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소대리인의 질문에 "누구를 죽이면서 돕는다고 하는 것은 참 우스운 것"이라며 "한국이 이라크를 돕는 방법은 많지만 무기를 든 군인들을 보내는 것은 아니다"고 정부의 한국군 파병을 비판했다. 미해병대 예비역 더스틴 맵글리 씨는 영상 증언을 통해 "미국의 가난한 노동자의 자식들이 결국 군에 입대해 이라크에 가서 이라크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다"며 "국제적인 노동자들의 연대를 통해 전쟁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침략전쟁의 시작으로서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 정부는 더이상 나의 정부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라크 침략 범죄와 한국 정부의 책임'과 관련해 증인 이태호 씨(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정책위원장)는 "한국군 파병과 관련된 '국익론'에서 '국익'은 특정 계층 혹은 계급의 이익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국민의 이익으로 오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라크 파병으로 북핵·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파병을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은 완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의 '반미' 성향을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몇몇 참가자들이 야유를 보내기도 하는 등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11시가 넘는 시간까지 이어진 재판에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기사 처음으로>

▷ 즐거운 물구나무 ◀ 여성의 이름으로

전법민중재판운동 여성총회 준비가 한창일 때, 이라크 여성증인으로 한국에 오기로 했던 지네 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못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그녀를 대신해서 다른 이라크인이 오게 되었다고 들었다. 그는 지네 씨의 오빠였다. 그녀가 오지 못한 이유가 정말 어머니 때문일까?

"전쟁이후 이라크 여성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나요? 후세인 시절보다 자유로워졌나요?" 지난 금요일 서울증권대회에서 증인들에게 던져진 질문이다.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안전합니다. 싸워야 하는 남성들의 상황을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전쟁의 당사자는 남성이고, 전쟁의 참상은 남성에 의해서만 말해질 수 있는가? 여성이 전쟁을 말하는 것은 금기였다. 한국에서 '정신대' 할머니들은 50여 년이나 긴 침묵을 강요당해왔다. 전쟁은 남성이 당사자이고, 남성만이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또한 전쟁에서 여성들의 고통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여성의 증언들은 왜 드러나기 어렵고, 오랜 시간 후에 말해질까? 아부 그라이브 포로 수용소에서 성폭력을 당한 여성포로가 가족에 의해 '명예살인' 당한 사건이 있었다. 전쟁에서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차별적 구조와 관습에 의해 침묵하기를 강요당하기 때문이다.

"이 전쟁을 하루라도 빨리 중단시킨다면, 우리는 이라크 민중의 무고한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라크 현지를 다녀온 이동화 씨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전쟁반대를 외치면서도 이라크 전쟁을 떠나면 나라의 일로 생각해왔을지도 모른다. 마음이 급해졌다. 하루라도 빨리...그런데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하는 것이 총성뿐인가. 치유되지 않은 것은 다시 더 심하게 끊기 마련이다. 이제는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내야 한다. 집단적 주체로서 여성이 전쟁범죄를 고발하며,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이 새롭게 기록되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진정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백지동의안을 목숨과 바꾸려 하는가

국방위, 파병연장 강행 시도

국회 국방위원회(아래 국방위)가 7일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아래 연장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려 해, 시민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이날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연장'을 강행하려는 시도에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병연장의 부당성을 알리고 '연장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먼저 파병연장은 이라크민중과 한국군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라크는 현재 2004년 3월 침공 때보다 더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특히 "충전을 앞두고 있어 치안이 극도로 악화될 것이 분명하며, 쿠르드 자치지역이 내전 발생의 내관과 같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방위는 국민들의 이런 우려에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파병연장만을 강행하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연장안은 지난 추가파병동의안과 마찬가지로 '백지동의안'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연장안에 명시되어야 할 임무나 예산 그리고 지휘체계가 불분명하고 모호하다는 것이다. 파병연장의 전제나 목적, 임무, 효과, 이라크 정세 등에 대한 분석과 전망은 사라진 채 '평화재건'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국회는 이를 따져 묻기는커녕 오히려 허수아비 '거수기'의 역할만을 자임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행동은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파병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러한 백지수표 연장안부터 국방부로 돌려보내는 것"이 국방위의 몫이라고 질타했다.

17대 국회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이 문제를 일당통방 넘기려 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국민행동은 "국방위가 국민의 비난을 의식해 이라크 현지를 조사하고 왔지만, 자이툰부대 주둔지인 에르빌을 단 하루 머물다 와서 '자이툰부대는 매우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다국적군 사랑부가 이라크 내 안정화 작전이 끝날 때까지 머물러주길 요청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은 조사결과 공청회를 요청했지만 국방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외에도 연장안은 파병 근거로 헌법과 유엔결의안을 잘못 적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국회가 이를 통과시킬 경우 국민적인 비난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행동은 현재 열린우리당에 연장안에 대한 공청회를 요청해 둔 상태다.

<기사 처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끝

이주노동자 380일간의 농성 마무리

울해도 어김없이 찾아 온 추위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다 없이 쌀쌀하기만 하다. 고용허가제와 단속추방에 반대하며 2003년 11월 15일 시작했던 농성이 380일째를 맞이한

지난달 28일,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이주노동자 농성단은 해단식을 진행했다. 그리고 12월 7일, 1년이 넘게 명동성당 들머리를 지키고 있던 천막 농성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농성장 정리가 투쟁에 대신 포기가 아니라 제2의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한다.

아노아르 농성단 대표는 "한 번의 투쟁으로 모든 걸 얻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명동성당에서의 농성은 마치지만 이주노동자 운동을 전국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더 열심히 투쟁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아노아르 대표는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투쟁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노동자의 권리' 문제로 사회적으로 알려냈다"며 농성투쟁의 성과를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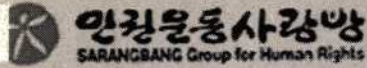
농성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은 더 강화되었고, 단속추방의 공포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의 행렬도 끊이지 않았다. 출입국관리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 단속을 하며 이주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가는 것도 모자라, 가스총과 그물까지 동원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을 벌여왔다. 아노아르 대표는 "최근에는 출입국관리소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이주노동자를 잡아가 '동료 중 누가 불법이고 합법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등을 자백하지 않으면, 테러리스트 딱지를 붙여 출국시킬 것'이라고 협박을 해 이주노동자들을 겁이가고 있다"며 인권탄압의 실상을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탄압에도 앞으로의 투쟁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루를 살더라도 인간답게 살겠다는 이주노동자들의 각오가 있기 때문이다. 아노아르 대표는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불법체류자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는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감옥처럼 생활하고 있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볼 때 우리의 투쟁을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며 새로운 투쟁의 시작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기사 처음으로>

제목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2월 09일 (목)
제 271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문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 1. 국보법 끝장 올해 꼭!
2. '탈시설'만이 인권보장 앞당길 것
3.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②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

국보법 끝장 올해 꼭!

열우당 갈팡질팡...한나라당 '색깔론' 공격

천신만고 끝에 국보법 폐지 법률안의 법사위 상정을 성사시킨 열린우리당이 하루만에 연내 입법 처리를 유보하겠다는 발표를 해 시민사회가 격분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7일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과 타협을 통해 국보법을 처리하려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연내 처리 방침을 확고히 하라"고 열우당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8일 밤, 열우당 당사 앞에서 규탄 촛불 집회를 열고 "개혁기만, 국민배신 열우당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이번에 국보법을 없애지 못한다면 개혁을 표방한 열우당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300여명의 단식 농성단을 대표해 무대에 선 국민연대 오종렬 공동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국보법 연내 처리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는 진실을 잘 못 본 것"이라며 "국보법 폐지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어찌 국보법 폐지를 그냥 넘길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 지역에서 모인 500여명의 참가자들은 '퇴장 천정배', '폐지 국보법', '규탄 열우당' 등이 적힌 빨간색 경고 카드를 열우당 당사 벽에 붙이고, 문화체에 이어 현재 밤샘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오는 11일 오후 4시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나라당 해체, 열린우리당 규탄 국보법 연내폐지 결사관철 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7일 민주노총도 열우당의 국보법 연내 처리 유보 입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해버리며, 온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개혁을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 또한 성명을 통해 "열우당이 진정으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기를 원한다면 국보법 폐지안의 연내처리라는 국민에 대한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약속부터 이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국보법 연내처리를 유보해가면서까지 '여야 대타협을 통해 민생현안을 처리해보자'며 한나라당에 보낸 열우당 천 대표의 '구애'는 딱하기 그지없게 됐다. 8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열우당 이철우 의원이 간첩'이라는 주장을 하며 또다시 '색깔론'을 펼치기 시작한 것. 결국 국보법 폐지안을 올해 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열우당 또한 국보법의 칼날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탈시설'만이 인권보장 앞당길 것

시설에서 일어나는 온갖 인권유린사건들과 부도덕한 시설장들의 횡령 등 복지시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언론의 도마에 올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설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토론회가 8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주최로 열렸다.

우선 수용시설의 '존재' 자체가 반인권적이라는 것이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토론회자로 참석한 장봉혜법원 임성만 원장은 "시설이란 사람들을 '특수한 환경' 속에 구조화시키는 것"으로 "어떤 목적의 시설이든 '관리'가 전제될 수밖에 없

다"고 분석했다. 강성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역시 "시설 수용자의 인권확보는 시설의 존재 자체를 문제삼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격리'가 아닌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주 발제를 맡은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열영국 변호사는 "기존의 법률이 문제가 된 시설에 대한 처벌이나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처우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칭)시설생활자 인권보장법'(아래 인권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열 변호사는 "정신보건법(제25조)·노인복지법(제28조)·아동복지법(제10조)이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입소를 허용하는 반면, 시설 운영자 측에는 절차로 시설운영기준을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있는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시설생활자 인권보장법 제정' 논의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안에서 강조해야 할 항목으로 △시설입퇴소권의 보장 △시설운영자 자격 제한 △시설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시설종사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민관 합동 실태조사와 공정한 법집행을 들었다. 20여 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우선미(뇌병변1급 장애인) 씨는 "시설에서는 중증 장애인은 마치 인격도 중증 장애를 가진 것처럼 대우한다"며 '인권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설생활자들의 인권유린이 기존 법률의 한계에 기인한다는 현실 인식에는 대체적으로 한 목소리가 모아졌지만 문제해결의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시각차를 보였다. 임 원장은 "시설은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만 운영되어야 한다"며 시급한 것은 인권보장법이 아니라 시설자체의 기능에 대한 논의와 정부의 시설정책 재고임을 강조했다. 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는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의 수준이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시설관련자 자격관리 강화와 감독·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한국여성마비장애인연합 김주현 씨는 "사회 각계의 어른이 '탈시설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각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어른에 귀기울이지 않은 채 '시설화'로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연금지도·주택지원사업 등의 사회복지정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기사 처음으로>

<전범민중재판 지상증거>②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

전쟁은 희망까지 삼킨다

"폭격으로 집이 부서졌지만 어쩔 수 없이 부서진 집에서 살고 있다. 물도 없고, 생활은 점점 힘들어지기만 한다." "전쟁이 일어난 후 일자리를 잃었다. 지금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 "미군이 한 나라를 망가뜨렸다." 8일로 이어진 전범민중법정에서는 영상을 통해 전쟁 피해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그러나 장경옥 변호인은 '무차별 폭격, 대량살상무기 사용, 민간인 공격 등의 전쟁범죄'에 관한 심리에서 "전쟁의 성패는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적의 전의를 조기에 꺾고 항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데 있다"며 "'충격과 공포' 작전으로 많은 이라크 부대들이 조기에 항복해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작전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이에 이라크에 다녀온 증인 이동화 씨('평화바다' 활동가)는 "'충격과 공포' 작전이 끝난 후에도 민간인들의 피해는 늘어나기만 하고 있다"며 변호인의 말을 부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과 11월에 미군이 이라크인들의 결혼식장에 무차별 사격을 가해 온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증언했다. 뿐만 아니라 "미군이 무차별적으로 폭격한 열화우라늄탄으로 인해 바그다드 티그리스강 주변의 관공서 지역은 일반 지역보다 방사능 수치가 천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미군은 이번 전쟁에서 만 1100~2500톤의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희 기소대리인은 "미국이 1991년 걸프전에서 열화우라늄탄을 처음 사용한 후 이라크에서의 암 발생율은 1989년 2만7천여 건에서 1994년 4만1천여 건으로, 선천성 기형 발생율은 1989년 674건에서 1994년 2386건으로 급속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열화우라늄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은 후대로 갈수록 피해를 더해간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다.

이어 '전쟁과 점령으로 야기된 이라크인의 고통'에 관한 심리에서 기소인 최용준 씨(의대 강사)는 "이라크는 1차 걸프전 이전에만 하더라도 상당한 보건의료체계를 갖추고 있었지만 지금은 암환자에 대해 아무런 치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소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김학용 변호인은 "미국에 적대정책을 취함으로써 경제봉쇄를 당한 이라크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실제 전쟁으로 인한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증인 우석균 씨(의사)는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시리아, 이란보다 이라크의 상황은 훨씬 좋지 않다"며 "경제봉쇄로 이라크의 보건의료체계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라크전 이후 더욱 급속히 악화됐다"고 설전을 벌였다. 이라크인 하이셀 카심 알리 씨(의사)도 증인으로 나서 "전쟁이 일어난 후 병원은 거의 파괴됐고 이라크에서 약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다"며 "이제는 의료가 병원으로 출퇴근하는 것조차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지경"이라고 전했다. "전쟁 후의 재건 활동이 이라크인들을 돕고 있지 않느냐"는 김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하이셀 씨는 "미국과 영국이 말하는 '재건'은

미·영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최근 이라크에서 석유 산출량은 늘어났지만 이라크인들은 오히려 석유부족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2003년 5월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이라크 초등학교생들의 84퍼센트는 "어른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살 수 있을까"하는 걱정에 시달리고 있다. 하이셈 씨 역시 "현재 이라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라크 사람들이 스스로 희망을 잃어 가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틈새를 맞이한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원한다면-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에 는 첫 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2월 10일 (금)
제 271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 ③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2. 클릭 인권정보 「성매매 관련 법률 안내서」
3. 2004년 10대 인권소식
4. <알림>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 ③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전쟁이 낳은 이란성 쌍둥이 - 고문과 학살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에 간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군도 언젠가는 이라크인들을 죽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라크인들도 한국군을 죽여야 할 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만나는 이렇게 좋은 한국인들과 서로 총을 겨누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라크에서 온 살람 갓만 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증언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그는 "말라본은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9일 부시-블레이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은 사흘째를 맞아 '수감자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와 팔투자 학살 등 집단살해'에 관한 심리가 진행됐다. 김철준 기소대리인은 "아부그라이브 감옥에서 일어난 학대와 성폭행, 그리고 팔투자 학살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 규정과 '집단살해' 규정에 해당되는 전쟁범죄"라고 기소요지를 밝혔다.

하지만 장경옥 변호인은 "미국은 아부그라이브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정당한 사법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전쟁범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기소대리인은 "이번 사건은 정보기관이 헌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부추긴 명백한 조직적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이라크전에 파병된 아들을 두고 있는 미국인 킵 로차리오 씨(평화운동가)는 "많은 이라크 참전 군인들은 가난한 노동자의 평범한 자식들이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에 입대했을 뿐"이라며 "군사주의가 그들이 비인간적 행위를 하도록 세뇌시키고 있다"고 영상을 통해 증언했다.

재판에서는 헬기에 탄 미군이 팔투자에 있던 이라크인들을 정조준해서 폭격하는 영상 자료가 상영돼 학살이 계획적으로 일어난 것임을 증명했다. 살람 씨는 "학살 이후 30만 인구의 팔투자에서 25만여 명이 난민이 됐다"고 밝히며 "팔투자 뿐만 아니라 사마라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집단살해가 자행됐다"고 실상을 전했다. 또 그는 "아부그라이브 감옥에 수용된 이라크 여성 중에는 17명의 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도 있고, 성폭행으로 임신한 여성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 전범민중재판 여성 기소인들은 총회 선언문을 통해 "전쟁이 여성에 대한 억압을 강화·재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라크에서 미군이 소녀들을 강간하기 전에 무자헤딘 전사들이 먼저 강간해야 한다고 발표된 명령을 소개하며, "첨령군에 의한 폭력뿐만 아니라 저항세력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은 모두 이라크 여성의 정치적 권리와 삶에 대한 통제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진행된 전범민중재판 관련 기사는 2회로 나누어 실립니다)

<기사 처음으로>

클릭 인권정보 「성매매 관련 법률 안내서」

지은이/ 퍼낸이: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막델레나의 집/ 2004년 12월/ 350쪽
성매매 피해여성이 성매매 탈출 과정에서 겪게 되는 법률문제를 분석해 이들이 수사·재판과정에서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단행본이 출간됐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성매매 착취에 놓여있는 피해여성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은 '법'을 활용해 자신을 가두고 있는 '구조적 족쇄'를 끊어낼 수 있도록 법

를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필요한 증거를 찾지 못하는 등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불리한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이 책은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는 성매매 피해여성들과 이들을 조력하는 법률지원 및 현장활동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책에서는 크게 성매매 피해자들이 겪을 수 있는 법률 문제를 형사, 민사로 나누어 실제사례를 통해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형사문제에서는 성매매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와 피해자특별규정, 선불금 사기, 법적 진행절차 등을 설명했다. 민사 문제에 있어서는 업무 및 알선자가 성매매 피해여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을 경우 대응 방법과 피해여성들이 노동착취를 한 업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소송절차를 소개하고 있다.

최근 포주에 의해 작성된 성매매 피해여성의 신상정보와 이들을 등급화 해놓은 자료가 공개돼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또다시 세상에 알려졌다. 성매매를 뿌리뽑기 위해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이 법이 '법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을 드러내도록 작동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피해여성들과 현장지원활동을 하는 실무자들이 이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여성들은 자신이 삶의 주체로 나서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이들의 경험이 더해지는 순간 인권운동, 인권개념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2004년 10대 인권소식'을 발표합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올 한해 동안 발생한 주요 인권사건(전체 53문항)에 대해 설문조사(각 10개 문항 응답)를 벌여 '2004년 10대 인권소식'을 선정했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모두 100명의 독자와 인권활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편집자주>

1. 국가보안법 폐지 합성이 의사봉 대신했다 (65%)

99년 이후 5년 만에 불붙은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종교, 학계, 시민, 사회단체 등 사회각계를 아우르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로 모아졌다. 8월, 국보폐지국민연대의 발족과 함께 본격화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대체입법과 폐지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던 정부 여당이 폐지를 결정하면서 박차를 가하게 된다. 뜨거운 여흥 1,350여km 국토를 걸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야기한 청년. 국가안보는 형법으로도 충분하다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형법학자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며 1일 시위를 하는 시민들. '상상력'을 질식시키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예술인들. 투쟁은 더 넓고 깊게 퍼져갔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크고 선명해질 수록 '보수'의 저항도 공격적으로 전개되었고, 그 두터운 장벽을 내보이기 시작했다. '안보중독증'에 걸린 한나라당은 국보법만은 절대로 폐지할 수 없다며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지키겠다고 시청 앞 광장에 모인 보수우익의 쫓기는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에서 저절로 사문화될 수 있는 단순한 법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상과 양심, 표현을 언제라도 억압할 수 있는 실제임을 확인시켰다.

12월, 정치권에서 혼전을 거듭한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최초로 그리고, 기습적으로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어진 열린우리당의 연내 폐지 유보 발표는 추운 겨울 국회 앞 단식농성단의 분노를 일으키며 전국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해 온 사람들을 국회 앞으로 불러모으고 있다.

2. 노예선 탈출의 등대, 성매매방지법 시행 (56%)

지난 9월 23일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와 성매매 알선행위자를 따로 처벌하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었다. 여성운동은 그간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을 '인권 피해자'로 보고 이들을 보호할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은 그러한 여성운동의 성과인 것. 이제까지 여성만을 취약시하는 '윤락'이라는 용어가 '성매매'로 바뀌고 이들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성매매를 둘러싼 인권침해 해결에 있어 진일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 법은 인신매매 등 매우 한정적일 경우에만 피해여성으로 규정하고 있고, 성매매가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인 '선불금 등 채무'에 의한 피해자 규정은 삭제되어 있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자 성매매를 옹호하는 반응들이 터져 나오면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감증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다수의 언론, 일부 남성 정치인과 관공임, 숙박업 등을 담당하는 '경제계'의 보이지 않는 진두지휘 아래, 수십조에 달하는 성산업의 붕괴를 들먹이며 포주들의 '생존권'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더욱이 집착촌의 일부 피해여성들이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하고 나서자 포주와 피해여성들의 이해관계가 동일한 것인 양 조작되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 사건 당시, 최창살 안에 갇혀 화염에 휩싸여 죽어간 피해여

성들처럼 '성노예'로 살아가는 이들의 인권을 다시 한번 유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2월 6일, 피해여성들을 앞세워 생존권 보장을 주장한 업주모임 '한터'의 대표가 피해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이들을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포주들이 현대판 노예선의 선장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한편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탈성매매를 위한 여성지원 시설의 입소율이 급증하는 등 탈성매매를 결단하는 피해여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피해여성들의 심신 치유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상담, 자활지원 대책 마련 등 갈 길은 아직 멀다.

3. 종교의 병역을 깨라 - 강의석 씨의 아름다운 저항 (52%)

6월 16일, 한 고등학생이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도발적인 시위를 시작했다. 대광고 3학년 강의석. 그의 시위는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강요되고 있는 거짓 신앙 고백에 맞선 최초의 공개 저항행동이었다.

그의 저항은 외롭지 않았다. '거짓과 강압의 전당'으로 변해버린 종교계 사립학교의 치졸한 행태를 고발하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고, '신도 수 확대보다 인권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각계에서 울려 퍼졌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학교측의 퇴학 통보뿐이었다.

9월 1일 법원의 퇴학 효력 정지 처분으로 강의석은 다행히 학교에 돌아갈 수 있었지만, 학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생명을 내건 단식을 이어가며 예배선택권 보장을 재차 요구했고, 또래 청소년들도 직접 행동으로 그의 저항에 힘을 보탤다. 마침내 단식 46일째를 맞이하던 24일 새벽, 종교 강요라는 녹슨 빗장에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종교계 학교들이 종교활동을 대신할 대체활동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전국의 종교계 사립고 수는 236개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종교가 강요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학교는 얼마나 될까. 강의석의 외침이 사회의 부끄러운 침묵을 일깨우고 인권의 사각지대인 학교에 변화의 물꼬를 틔운 용기 있는 저항이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학내 종교의 자유가 전국의 학교에서 참으로 실현되기까지 깨뜨려야 할 병벽은 여전히 높고 강고하다.

4. 풀뿌리 조직이 만드는 켈트 '평화운동' (51%)

2004년 6월 22일 바그다드 팔루자 방향 35Km에서 고 김선일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온 국민을 얼어붙게 만든 이 사건으로 파병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났다.

매일 저녁 7시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도시에서 파병철회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개최되었고 '더 이상의 비극을 막는 길은 파병철회 뿐'이라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걸렸다. 평화단체와 시민들은 전쟁반대와 파병철회를 요구하는 피스몹(peace mob)을 도심 곳곳에서 진행했고,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에게 파병철회 정책권고를 요구했다. 항공 조종사 노조는 파병되는 군인들을 수송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사이버 공간에서는 네티즌들이 '국익론'의 허구를 밝히며 파병에 반대하는 주장들을 펼쳐 나갔다. 파병 진야에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자이툰 부대 앞에서 밤을 새워 파병철회를 외치기도 했다.

정부가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고 도둑 파병을 한 이후, 이 운동은 소강상태에 빠진 듯 보였지만 평화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다. 김제복 수사와 동화작가 박기범 씨는 전쟁 반대와 철군을 주장하며 50여 일 단식을 단행했고 이들과 같은 마음의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꿈틀대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라크 전범 '부시'와 '블레어', '노무현'을 심판하는 전범민중재판운동으로 모여들었고, 3400여명의 자발적 기소인들은 12월 7일~11일까지 진행되는 민중재판의 주역이 되었다. 한편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반전평화를 노래 가락과 장단에 실어 나른 '평화바람'은 전국 풀뿌리조직에게 '평화운동'을 전달하는 방물장수와 같았다. 올해 평화운동의 가장 큰 결실은 풀뿌리조직의 결집이라 할 수 있다. 대규모 운동조직에 속하지 않은 이들은 '평화'를 키워드 삼아 흩어지고 모이기를 반복하면서 이 운동의 커다란 수레바퀴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5. 온몸으로 쓴 '인권의 역사' 380일 - 이주노동자 천막농성 (49%)

2003년 11월 15일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와 단속추방에 반대하며 명동성당 들머리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농성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부의 단속 추방 정책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은 더 강화되었고, 단속추방의 공포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의 행렬도 끊이지 않았다. 출입국관리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 단속을 하며 이주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가는 것도 모자라 가스총과 그물까지 동원해 '인간사냥'을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멸 타파 농성단 대표가 강제출국을 당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테러리스트 위협'이 있다고 발표하며 이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기도 했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불법체류자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의 단속 강화로 불법체류자가 된 이주노동자들은 집안에만 갇혀 지내는 등 감옥과 같은 나날들을 견뎌내고 있기도 하다.

농성 380일째를 맞이한 11월 28일 농성단은 '고용허가제 폐지와 단속추방 중단'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한 채 농성을 마무리하고, 온갖 체류가 가득 배인 천막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1년이 넘도록 천막에서 새우잠을 자며 추방의 공포 속에서 도 집회를 이어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는 '노예'를 거부하고 '인간'임을 선언하는 치열한 인간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었다. 이는 하나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지난한 과정을 통해 '인권의 역사'가 쓰여진다는 진리를 체험하게 한 것이다. 해단식 후 이들

은 제2의 부정을 위해 전국 조직 건설을 설계하며 숨을 고르고 있는 중이다.

6. 세계 3위 전범국가, 멈추지 않는 파병 (46%)

"파병 철회! 추가파병 반대!!" 싸늘하게 맞바람 치는 여의도의 아스팔트 위에서 국민들은 절규하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국회는 문을 굳게 닫았으며, 국회의원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가렸다. 그리고 2월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와 국회는 부시가 일으킨 야만적인 침략전쟁의 '확실한' 공범임을 자임하게 됐다.

하지만 전범국가의 국민으로서 느끼는 양심의 무게는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다. 여의도, 광화문, 종로, 시청 앞... 파병 철회의 행진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엔 경기도 광주 자이툰 부대 앞에서 밤을 새며 파병의 행군을 온몸으로 막았다. 하지만 8월의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자이툰 부대는 학살로 뜨겁게 달아오른 이라크를 향해 도둑처럼 한국을 빠져나갔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의 군인들을 이라크로 보낸 것이다.

이라크 수용소 내 미 점령군의 포로 고문과 성 학대, 이라크 무장단체의 한국군 철수 요구와 김선일 씨 살해, 이라크에 대량살상 무기가 없었다는 듀얼퍼 보고서, 스페인, 필리핀, 태국으로 이어지는 철군 도미노 등 국제적으로는 파병의 당위성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세계 3위의 전범국가 한국에서는 파병연장 동의안이 8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다. 어느덧 여의도 아스팔트 위에 또다시 싸늘한 맞바람이 치고 있는 지금, 파병의 행군은 멈추지 않고 있다.

7. 사내하청이 살해한 노동자 박일수 씨 (45%)

지난해 새해 벽두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분신으로 시작된 '노동열사정국'이 올해까지 이어져 2월 14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박일수 씨가 정부의 노동정책에 항거하며 또다시 분신사망하기에 이르렀다.

박 씨는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체불, 퇴직금 등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다 강제 해고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 사망 당시 그의 옷옷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진실된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는 일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적혀 있었다.

문제는 바로 사내하청이라는 고용형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한 채 정규직 노동자들과 한 작업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 임금의 50~60%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다. 작업 환경과 노동 강도 또한 70년대가 따로 없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복지에 있어서의 차별이나 비인격적인 대우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일일이 나열할 수조차 없이 많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어려움은 고용불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내하청은 현대중공업의 문제만이 아니다. 현대자동차 역시 사내하청으로 빚어지는 노동자 차별이 문제되었고 지난 9월 22일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측은 여전히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8. 공무원 노동자로 다시 태어나다 (44%)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11월 15, 16일 이틀에 걸쳐 총파업을 실시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개혁'을 내걸며 노동3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파업 권을 행사했으나, 정부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앞세우며 파업을 불법화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법'에는 공무원들의 단결권, 단체협상권 등을 보장했다고 하지만 실질적 권리인 단체행동권이 빠져 있어 노동1.5권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단체행동권이 삭제된 노동조합법은 사실상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고장난 시계와 같다.

파업이 있기까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와 교섭을 시도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회피해 사실상 파업을 유도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행위조차 경찰력을 동원해 무산시켰으며 마구잡이식 불심검문, 봉화내역 조희 및 위치추적, 체포영장 없는 가택수사, 감시와 미행 등 조합원에 대한 권리침해는 어느 악덕기업 못지 않았다. 5일 현재 총파업과 관련 파면 91명, 해임 126명, 정직 192명 등 409명이 중징계를 받았으며, 징계처분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수까지 포함하면 징계는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정부는 전국 공무원노조 총파업 사태를 계기로 공무원의 집단행동, 정치운동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마저도 압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노조사무실을 원천 봉쇄하는가 하면, 노조원들에게 조합활동포기 각서를 쓸 것을 강요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공직 사회의 개혁을 뒤로 돌리려는 정부의 어리석은 것은 더 큰 화를 부르기 전에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8. 북한인권법, 한반도 평화에 먹구름 (44%)

미국이 '인권'을 '무기' 삼아 북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시키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은 북 체제 붕괴를 의도하는 '북한자유법안'과 올해 '북한인권법'을 의회에 상정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에 먹구름을 드리우더니 지난 10월 '북한인권법'을 상·하원이

통과시켜 그 우려를 현실로 만들어 버렸다.

북한인권법은 북의 인권을 신장한다는 미명 하에 북을 '돈'으로 붕괴시키겠다는 야욕을 한껏 드러내고 있다. 탈북자 지원 NGO에 매년 '2천 만불 지원' 및 북의 자유 촉진과 인권 개선에 '4백만 달러' 지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를 책정했다. 그 뿐 아니다. 대북 방송 수신을 위한 라디오 지원에 '2백만 달러'를 쏟아 붓겠다고 법안은 명시하고 있다. 인권을 돈으로 '매수'해 보겠다는 계획에 국내 인권단체 뿐 아니라 전 세계인권단체들이 그야말로 아연질색하며 '인도주의'를 빙자한 미국의 도발을 맹비난했다.

법안의 도발성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인권법이 발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른바 '기획탈북 브로커들'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들은 한편으론 미국 NGO들에게 접근을 시도하면서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를 피어 외국 공관으로 진입시키는 기획탈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보수언론은 '정치적 망명자'들을 소개하기 바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획탈북에서 빛어지는 반인권적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말았다. 이처럼 북한인권법은 '인권'으로 걸치장하고 있을 뿐 북의 인권개선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북의 인권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는 필수적이지만 북한인권법은 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10. 현대판 노비문서, 비정규직 입법안 (43%)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을 졸라온 정부의 손아귀 힘이 점점 더 세지고 있다. 지난 9월 10일 정부는 사실상 파견업종 전면허용을 골자로 하는 개악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고 이용석 씨가 자신의 몸을 불태워 저임금·장시간노동, 반복되는 해고와 생활고에 찌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절규한지 불과 1년이 채 못된 때였다.

정부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현재 26개 파견업종을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전체업종으로 확대하고 △현행 2년의 파견기간을 3년으로 늘려 기업에 계약상시적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넓혀주고 있다. 결국 중간착취와 저임금, 고용불안과 노동3권 원천봉쇄라는 파견노동의 족쇄를 전체 노동자에게 채워주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꼬리를 물었다. 개정안 발표 직후 비정규노조 대표단은 노동법 개악 중단과 노동계의 총력 대응을 촉구하며 열린 우리당 점거 및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개정안이 국회에 회부되면서 103개 단체가 '비정규노동법개악저지와노동기본권쟁취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포했다. 전국비정규직노조는 11월 24일부터 간부파업에 돌입했고, 비정규 노동자 4명이 11월 26일 국회 내 50미터 높이의 반평짜리 타워크레인을 점거, 칼바람 속 농성을 시작했다.

이러한 거센 저항 앞에 지난 11월 29일 국회 환경노동위는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기지 않기로 결정해,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연내처리는 불가능하게 됐지만 그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 밖에 △농민생존권 위협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36%)가 11위였으며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불붙은 직접 민주주의 운동('국민소환권' '국민발의권')(31%)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 운동과 그에 대한 보수 사학의 움직임(29%) △정부의 최저생계비 등 빈곤 대책에 대한 저항(24%) △미국의 이라크 포로 석교문(24%) △삼성 SDI의 노동자 위치추적 등 노동탄압(24%) 등이 올해 주목을 받은 주요 인권소식이다.

<기사 처음으로>

<알림>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

- ▶ 12월 10일(금) 오후 5시, 7시/ 연세대 광복관 B105
- ▶ 상영작 <유령을 부르며: 강간, 전쟁, 여성에 관한 이야기>
- <바그다드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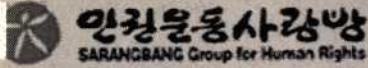
전쟁은 끝났다. 우리가 원한다면!
부시·블레이 노무현 전법 민중재판

- ▶ 12월 11일(토) 오후 3시~10시/ 경희대 크라운관

한나라당 해체, 열린우리당 규탄
국보법 연내폐지 결사관철 국민대회

- ▶ 12월 11일(토) 오후 4시 / 여의도 국민 은행 앞

<기사 처음으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12월 11일 (토)
제 271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문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파병연장안, 결코 동의할 수 없다
2. 현대차 사내하청 '모두' 불법파견
3.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 ④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4. '이중심'의 몸살 앓는 열린채널

<논평> 파병연장안,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라크 파병부대의 주둔기간을 1년 연장하자는 '파병연장 동의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올라와 있다. 부시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며 전범국가가 된 지 벌써 1년 8개월. 올해 말이면 전범국가 국민으로서의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겠거니w 기대했지만, 파병연장안이 끝내 국회 본회의까지 진출한 것이다.

파병연장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건 단 이틀만이다. 국회의원 50명이 제출한 '파병재검토 결의안' 등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고, 공청회를 개최해 파병에 대한 평가와 토론을 해보자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밤, 여야 모두 정쟁에 휘말려 아무 것도 처리하지 못한 채 끝났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열리면 파병연장안은 급행열차를 타게 될 운명이다. 국가보안법 등 개혁법안 처리에는 악다구니를 치며 온몸으로 저지하던 한나라당조차, 이번 파병연장안에는 정부와 손뼉을 짝짝 마주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라크 파병과 연장의 명분으로 국익과 평화재건, 한미동맹을 즐기 차게 되뇌었다. 하지만 정부가 내세우는 국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진 바 없다. 비전투 지역인 쿠르드 자치지역의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에 굳이 군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어왔다. 그리고 맹목적인 한미동맹은 평등한 한미관계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은 파병 철회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고, 국회는 파병연장안의 타당성에 대해 책임 있게 논의를 진행했어야 했다.

돌이켜 보면, 정부와 국회가 언제 파병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은 적이 있었던가? 아부그라이브 교도소 내에서 미군이 포로 고문과 성학대를 자행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도,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 김선일 씨가 살해당했을 때도, 이라크 대량살상 무기 보유설과 알카에다 연계설이 미 듀얼퍼 보고서에 의해 거짓임이 판명났을 때도,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안전보다는 부시의 입맛에 더욱 민감해 하지 않았던가!

국익과 평화재건, 한미동맹이라는 화려한 수사에 더 이상 현혹될 국민은 많지 않다. 그리고 지금 부시와 노무현을 민중의 법정에서 세워 그들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이 뽑은 노무현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국회에 의해 번번이 '배신'을 당해 왔지만, 이제 국민들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전범국가 국민의 양심으로 우리는 결코 파병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철군의 그 날이 비로소 평가가 시작되는 날임을 확신한다고.

<기사 처음으로>

현대차 사내하청 '모두' 불법파견

노동부 시정 조치 미흡...노동계,

현대자동차 산하 울산공장 101개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전원에 대해 노동부가 불법 파견 판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노동 현장에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노동부는 "현대차가 울산공장과 전주공장에서 일하는 8천여 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생산 공정에 투입해 함께 일하게 하고, 인사노무관리도 본사에서 직접 맡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의 근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다음주 중에 현대차에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현대차 울산공장과 아산공장의 하청업체 21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9월 1천8백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과건으로 인정했다. 결국 현대차는 울산, 아산, 전주공장 사내하청업체 120여 곳에서 일하는 1만여 명의 노동자 '모두'를 불법적으로 고용해 중간착취와 차별을 행해 온 것.

이에 노동계는 '제조업 사내하청=불법과건'이라는 그동안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었을 뿐 새롭게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현대자동차 비규격노동조합(아래 현자비정규노조)는 9일 성명에서 "노동부의 이번 판정은 현대차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노동자 1만여 명을 불법적인 과건근로 형태로 사용하며 온갖 차별과 착취를 해왔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성토했다.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연맹)이 지난 5월 발표한 '금속산업 사내하청 실태 사례집'에 따르면, 금속제조업의 경우 과건금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시키고, 원천이 정한 잔업·특근에 입해야 함은 물론, 제반 규정까지도 준수하도록 하는 등 도급으로 눈속임해 공공연하게 불법과건 형태로 고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노동부가 불법과건 판정에만 그칠 뿐 이들에 대한 정규직화를 강제하지 않아 노동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9월 불법과건 판정 이후에도 노동부는 현대차에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개선계획서'만을 제출토록 조치했을 뿐 직접고용을 지시하지 않은 것. 이에 금속연맹은 "노동부가 불법과건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주문하지 않는 것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이번 불법과건 조사의 '최종 통보'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력한 투쟁을 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9월 노동부의 시정 지시에 대해 수용을 거부해, 11월 11일 경찰에 고발조치 된 상태다. 이번 판정에 대해서도 현대차는 "불법과건근로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노동부의 불법과건 판정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자비정규노조는 이에 대해 "현대 자본이 스스로 범죄행위의 1/10이라도 짓는 길은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을 당장 정규직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처음으로>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 ④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전쟁, 지울 수 없는 기억

"21살의 아름다운 청년 김영만은 베트남전 당시 베트남에서 죽었다." 베트남전 참전 군인 김영만 씨는 고통스러운 듯 입을 뻐다. 베트남전 참전으로 5천여 명의 한국군이 사망했고, 1만6천여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1만여 명의 군인이 고엽제로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다. 김 씨는 "베트남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군복에서 피냄새가 나는 것같이 하루라도 빨리 군복을 벗고 싶었다"며 "제대해 군복을 벗던 날 통곡하며 울었다"고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아부그라이브 사건'을 보았을 때도 통곡을 했다"고 전했다. "미군이 아부그라이브 감옥에서 저지른 만행과 한국군이 베트남인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시-블레이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 셋째 날, '한국 거주민의 권리 침해'에 관한 심리가 마지막으로 진행됐다. 위대영 기소대리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을 결정하면서 국민들은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당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혔지만, 장경욱 변호인은 "파병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정당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한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는"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한국인들의 권리 침해에 관한 증인들이 쏟아져 나왔다. 오무전기 노동자로 이라크에 갔다가 지난해 살해당한 김만수 씨의 딸 영진 씨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영진 씨는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방송을 통해 접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정부가 끝까지 파병을 고집해서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도 정부는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녀는 "더이상 아버지와 같은 희생자가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반전집회에 참가하게 됐다"며 "우리 가족의 행복추구권을 되찾고 싶다"고 전했다. 역시 오무전기 노동자로 이라크에서 부상을 당한 임재석 씨의 형 석순 씨는 "파병에 반대하기 위해 1인 시위에도 나서고 파병반대집회에도 참석하던 동생이 김선일 씨의 사망소식을 접하고 정신적 충격이 심해져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생활하기조차 힘들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는 본래 임재석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석순 씨가 대신 올 수 밖에 없었다.

증인 박영희 씨(장애여성공감 대표)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지하철거 전동리프트를 타야하는 하루하루는 마치 전쟁과 같다"며 "국회의원들에게는 저상버스보다 전투기나 미사일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교사였다가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언하며 지난 8월 6일 직위해제 당한 최진 씨도 증인으로 나서 "전쟁과 파병을 통해 국가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생각을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며 국가의 비도덕성을 지적했다.

사흘동안 진행된 전범민중재판은 11일 부시 블레이어 노무현에 대한 최종기소와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